

# 의안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6. 23.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전요지 : 따 로 불 임
4. 검토의견 : 따 로 불 임

위 안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8년 7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환 구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8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제 안 이 유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미관지구 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규모,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및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 요 내 용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3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확대함(안 제6조).

나. 소규모 건축물 및 미관도로변에서 가시되지 않는 증축을 자치구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함(안 제7조).

다.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정함(안 제17조의2).

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안 제17조의3).

마. 건축사 설계대상 용도변경허가를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포함함(안 제18조).

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기준을 마련함(안 제46조).

사.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기숙사·교정 및 군사시설·자동차관련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완화 또는 삭제함(안 별표 2).

###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2008. 3. 21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6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절차,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 당초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10인 이상 30인 이하에서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하고, 매 회의 때마다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2층 이하 또한 연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과 미관도로변에 가시되지 않는 증축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 위원회 회의개최시 부의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던 것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하였음.
- 안 제18조에서는 건축사가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 안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별표2에서는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 안 제7조의 경우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당초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9조에서 정한 건축위원회의 회의 사전 통지기간을 당초 회의개최 5일 전에서 3일 전까지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효과는 기대되나, 안전에 대한 위원들의 사전 검토가 미흡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안 제18조의 경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0. 1. 28에 개정되었음에도 8년이 지난 금번에 개정함에 따라 조례 운영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 안 제46조에 의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의 경우 우수 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기준에 의한 우수관리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별표 2에서 정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 중

- 자동차 관련시설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기준이 당초 3~6미터에서 1.5~3미터로 완화되어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과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 본 조항은 지난 2007. 4. 13 제165회 임시회에서 의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사생활보호와 주민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격거리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수정 가결된 사항으로 조례개정 이후 관계법률 등의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민원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